

大學教育의 反省

玄 勝 鍾
(翰林大 總長)

오늘의 학원 사태 원인을 教育內的 측면에서 볼 때, 政治的 權威主義 체제 하에서 教育界 자체가 그 압력에 굴복하는 教育을 하였다 는 것도 一要因이 된다. 권위주의 체제의 오류를 비판·지적하지 못하고, 自由·民主의 실현을 위해 용기를 내지 못한 屈辱的 姿勢로 교단에 섰던 것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1. 머리말

우리의 대학 사회는 近代的 教育이 시작된 이래로 거의 편안한 날이 없이 혼란을 거듭해 왔다. 日帝 統治下에서는 민족의 자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랬고, 2차 대전 직후에는 좌우익 간의 투쟁으로 그랬고, 조국 광복 후에는 오랫동안의 독재 내지 권위주의 體制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민주를 찾기 위해서 그랬었다. 그리하여 어떻든 그 소원은 성취되었다. 8·15 해방이 그것ियो, 6·29 선언이 그것이다.

이제 완전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런대로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오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6월이 지난 지 만 3년을 넘긴 지금이건만, 학원은 소위 운동권에 속하는 일부 학생들의 分別없는 行爲로 인하여 진통을 겪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유럽과 소련이,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몽고와 같은 나라가 개방과 개혁의 폭풍을 일으켜 정치·사회·문화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로의 전환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수술을 시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도 그러한 바람에 휩쓸릴 듯이 엿보이는 마당에 이러한 경향에는 눈을 감고 위의 나라들이 벗어 버린 현 옷을 주워 입으려는 無分別한 성향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대다수 일반 학생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그리고 일반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반감을 일으키면서 말이다.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우리 국민의 性急性에 있기도 할 것이다. 오랫동안 계속된 권위주의의 장벽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일찍이 가져보지 못하였던 자유민주주의의 물꼬가 6월 항쟁의 결과로 트이자, 이때까지 억제되었던 욕구가 당장에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나머지, 이에 미치

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의 토로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복지 사회의 이상이란 한이 없는 것이며,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또 그동안 정부가 보여 온 우유부단한 시정 자세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혹시 집권자는 Adam Smith가 생각하였듯이 자유 방임 속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잡힐 때에 방종 아닌 진정한 자유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었음은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처음부터 될 것과 안 될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毅然한 자세로 질서를 잡기에 소홀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감소되었을 것이다.

한편, 대재벌을 비롯한 많은 기업가들이 권위주의적 정부의 비호와 지원 하에 성장하면서 分配正義의 실현에 소극적이었던 타성에서 자발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점도 중요한 원인을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教育內的 反省

운동권 학생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오늘의 학원 사태의 원인은 教育外的 측면에서도 많은 것을 거론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시각을 교육 내적 측면으로 돌려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역시 교육계 자체가 정치적 권위주의의 체제 하에서 그 압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에 굴복하는 교육을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길은 없을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판하고 그 오류를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있어야 할 자유와 민주의 모습을 실현하도록 용기를 내지 못한 굴욕적 자세로 교단에 섰던 것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정의의 견지에서 학생이 제시한 의견이 현실적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내용인 경우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용기를 갖기가 어려웠으며, 정치적 권위주의에 저촉되는 이론을 전개하지 못하는 비굴을 면하기가 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교육과 교육자의 권위는 실추되었으며, 나아가서는 학생

들의 불신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념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긍정적 이론을 전개하기 보다는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혹·백 논리의 전개에 치중하였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反共을 國是로 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던 사실에서 곧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에 대해 이성적 비판을 가함으로써 그 취약성·모순성 등을 깨닫게 하기보다는 감정적 공격을 가하는데 치중하는 교육을 실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자유의 물결이 밀어 닥치자 학생들은 종래에 교육받은 공산주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고, 심지어는 반동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마저 갖는 경우도 생기게 된 것이다. 禁斷의 열매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이 강해지듯이 말이다. 게다가 교수에 대한 불신 풍조는 학생에 대한 설득력을 상실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권위주의 하에서 금기시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 학자들에게마저 접근을 금지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학생들을 설득시킬 능력마저 갖추지 못한 형편을 만들고 말았다.

이러한 상태는 비단 대학교육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국민학교에서부터,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교육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아니 대학에서보다도 더 심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은 심하게 말하면 대학 입학 시험 준비에 치중하여 이른바 畵人教育을 소홀히 하고, 그 교육과정 나름대로 요구되는 보편적인 高等普通의 지식 제공과 인격의 함양을 등한히 하였다. 말하자면 고등학교 교육은 대다수 청소년이 관례적으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식화되었다고 해도 크게 망발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념 교육에 관하여 보더라도 '감정적'으로 주어진 지식을 그저 그런 것으로 받아 들였으며, 그것에 대한 비판을 가하여 참된 모습을 찾는 힘을 가지지 못하였다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급작스레 지금까지 배워서 알았던 것이 유일의 전부인 것이

요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우기 운동권 학생들에 의하여 종전의 지식과는 반대되는 편향된 견해가 집중적으로 주입되면서 역시 비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경향을 보게 된다. 이것이 오늘의 이른바 학원 소요의 핵심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할 뿐 대다수의 학생들은 운동권의 논리와 행태에 물들지 않고 건전한 대학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大學教育의 反省

1) 大學 運營은 正常인가?

비단 대학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것이 국가 발전에 미친 기여도와 그 기능 내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계대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따지고 보면 오로지 교육에 의한 人力開發의 所致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열매는 교육에 대한 응분의 배분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이외의 분야에만 투입되고 있어, 교육은 아직도 좋게 말해서 '70년대 초반, 좀더 심하게 말하자면 '60년대 초반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校舍가 그렇고, 교실이 그렇고, 책상과 걸상이 그렇고, 화장실이 그러하며 겨울의 난방이 그러한 등등이다. 대학이라고 하여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서울대의 1년간 도서관 국고 예산이 5억 원을 넘지 못한다고 들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이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는 것은 緣木求魚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경제 성장도 좋고 복지 향상도 필요한 일이지만, 위정자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야 학원 소요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財政補助는 외국의 예를 감안하면서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립대학에 관해서 보건대, 학교를 경영하는 재단은 대학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로 착각하거나 公共性을 무시하고 私物視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조국 광복 후 얼

마 동안은 그러한 경향이 많아 대학 망국론까지 거론되었지만, 이미 그것은 지나간 시대의 망령에 불과할 뿐 그것이 되살아 날 시대는 결코 아닌 것이다. 혹시 아직도 그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학 경영자가 있다면 그것이 학원 소요의 원인이 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재단은 대학이 제 모습을 갖추고 제 구실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대학의 재정을 지탱시키는 한 대학은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대학에 대한 재정적 기여는 있어야 하며, 그것 없이 재단이 대학의 재정권과 인사권을 장악하려 한다면 그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재단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재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또한 총·학장의 任免權은 재단이 갖되, 그러나 교수와 직원의 임면권은 대학 행정의 책임자인 총·학장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야만 인사에 공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총·학장의 인사권 행사에 불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재단이 그 시정을 촉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무조건 사학의 재정권과 인사권을 재단에 넘겨준 것은 옳지 않은 조치라고 사료된다. 한편, 근자에 교수단이나 교수·교직원·학생의 조직이 총·학장의 임명권을 재단으로부터 박탈하거나 또는 제한하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긍정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대학교육이 正常을 찾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를 다수 확보하여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을 낮게 함으로써 개별 교육의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도서관을 충분히 비치하고, 실험·실습의 기구와 기재를 불편함이 없도록 구비하는 등 인적 여건과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 역시 학원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책일 것이다.

2) 教育 理念과 目標의 空虛

교육에 있어서 인적·물적 요소의 충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이념·목표의 확립과 실현이라고 확신한

다. 우리나라의 교육, 특히 대학교육은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건학 이념과 교육 목표의 포기 또는 不在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금할 길이 없다. 교육의 기술은 향상되었는지 몰라도 교육의 정신은 빠져 있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은 제공하여 왔지만, 사람은 얼빠진 존재로 만들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육성한 인간의 유형에 차이가 없으며, 사립대학 사이에서도 鑄造해 낸 인간의 특성에 차이가 거의 없다. 대학은 오직 지식을 제공하였을 뿐 인간을 형성하는 데는 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이것 역시 대학의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하여도 망발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각 대학 나름대로의 건학 이념과 교육 목표에 바탕을 둔 敎養敎育의 不在에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것을 교양교육의 裝飾物化라고 일컫고 있다. 어느 대학에서나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소위 교양 과목의 개설과 그것의 무성의한 강의만으로 교양교육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양교육의 내용에도 普遍性和 特殊性이 가미되어야 한다. 어느 대학에서나 공통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과목뿐 아니라 각 대학에 특수한 과목을 개설하거나 또는 공통된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 대학에서 특수하게 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강의하는 교수가 자기 대학의 특수한 이념과 목표에 역점을 두고 강조함으로써 보충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근자에 교양 과목에 있어서 무작정 선택의 폭을 늘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잡다한 과목을 수다하게 나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양다기한 학문을 이해하는 데 근간이 될 수 있는 또는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는 교과목의 필수적 부과 없이 교과목의 백화점식 나열만으로는 잡다한 지식의 소유자는 만들 수 있을지언정 자기 철학과 체계를 갖춘 敎養人은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특성 또는 개

성 있고, 따라서 자기 주장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의 형성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근자에 건전한 思考를 하는 데다수 학생들이 운동권 학생들의 주장과 행위에 內心으로는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못할 뿐 아니라 운동권 학생들의 요구에 압력을 느껴 본의 아니게 끌려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각자의 正體性을 키워주지 못한 교양교육에 중요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3) 教授像의 混濁

(1) '지도'의 등한

이 글에서 필자가 힘을 주어 강조하려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상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교수상의 일반론을 전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학원 소요 사태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교수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교수의 임무는 연구와 교수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되, 사회 봉사의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 학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연구와 교수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교수가 이 두 가지에 관하여 사명 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훌륭한 교수로서의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연구에 관하여 언급한다면 연구 없는 교수는 대학에서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됨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대학 사회에는 그런 교수가 전연 없는 것도 아닌 듯이 보임은 필자의 과문 또는 단견의 탓으로 돌리자. 그러나 필자가 이 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특히 일부 인문·사회과학자의 경우 사회 현상의 全體를 관찰하고 파악함이 없이 전공 학문에 관련된 一部分만을 천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운동권 학생들의 주장에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는 일이 있다면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교수 개인의 세계관, 통틀어서 가치관이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을 말릴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수의 교육자적 기능에 관하여서이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남용되어 많은 대학인으로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지도'에 대해 많은 교수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감히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학생처가 맡아서 할 일이지 교수가 할 일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수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교수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향마저 없지 않음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기 학과에 속하는 학생, 자기가 직접 가르치고 있는 학생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일신상의 것이든 이념상의 것이든 그 교수에게 지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학생처가 다룰 일이 아니요, 또 다룬다 한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거늘 소속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는 不關焉이요, 강의만 끝나면 내가 할 일은 다했다는 듯이 연구실에 칩거하여 학생 문제는 생각하지 않거나 마치 시간 강사처럼 가방을 들고 퇴근해 버리는 교수라면 교수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知識商人化는 바람직한 교수상에서 멀리 떨어진 비교육자적 모습일 것이다. 비록 시간 강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기야 학생 아부형의 교수에 비하면 지식 상인형은 또 나은 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소신에 따라 운동권 학생과 생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별 도리가 없는 일이지만, 소신을 굽히거나 無定見하여서 학생들에게 동조하거나 아부·아첨을 일삼아 학생들의 인기를 모아 보려고 하는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가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또한 학생들이 명백한 과오를 저지르더라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 학생들의 자각에 의하여 과오를 뉘우칠 것이라는 구실 하에 방관을 일삼는 교수가 있다면 이 또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2) 수업의 불충실

교수가 수업을 충실하게 철저히 하고 성적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할 권리와 의무에 만전을 기한다면 학생 소요 사태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예를 의학교육에서 보았고, 수업에 철저한 몇몇 교수의 경우에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수업이라 함은 출석을

점수화해서 엄격히 따지고, 강의를 충실히 하며, 과제물로 시간의 부족함을 절감하게 만들고, 부정 행위가 없도록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하며, 체계에 동정 점수가 가미되지 않도록 냉엄성을 견지하는 일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 원래 수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요 교수의 임무이거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처럼 편안한 직업이 없을 것이다. 일단 대학의 전임 교원으로 채용되면, 교수 再任命制가 형식상 있다고는 하지만, 대과가 없는 한 정년에 이르기까지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구 업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수업에 허술함이 있더라도, 학생 지도를 외면하더라도 월급은 12달 꼬박꼬박 나오며 아무도 교수직을 내놓으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교수의 契約制 採用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이것은 지금의 교수 재임용 제도와 같은 취지의 제도인데, 종래에 그것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에 그 폐지가 주장되고 있지만 그러한 폐단만 없다면 그 제도를 살리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컨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재임용에서 탈락하면 다른 대학에서도 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가혹하다는 등정론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개인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을 그르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맺는 말

선진 외국에서도 학생들에 의한 학원의 소요 사태는 극심하게 있었다. '60년대 후반의 이른바 student power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진정되었으며, 그 후 대학은 다시 평온을 찾아 학생들은 낮과 밤을 이어 면학에 열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조국 광복 이후 학원가는 하루도 寧日이 없었다. 밤을

새우며 머리를 싸매고 단학에 열중하여도 선진
국에 따라갈 수 없는 형편에서 돌맹이와 화염병
이 날아다니고 이에 맞서 날아드는 최루탄은 마
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민족의 독립을 빼앗
기고, 자유와 인권을 탈취당하였을 때에는 학생
들의 반항 운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여건이 미미하나마 마련된 지금에
와서는 이 무슨 국력의 낭비요 소모인가? 정부
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대

오 각성해야 할 때이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로서는 나라가 우리
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우
리가 나라를 위하여 또 오늘의 학원 사태를 위
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히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그럴진대 재단이건
교수건 직원이건 학생이건 간에 모든 대학인은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임무와 사명을 세삼 자각
하고 행동으로 최선을 보여야 할 때이다. *